



백화점 입구에 등장한 열화상 카메라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주신세계가 유동 인구가 많은 백화점 후문 입구와 버스터미널 방향 출입구 등 2곳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 방문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 군 공항 이전 실타래 풀리나

해결책 마련 위한 시·도 태스크포스 구성 합의
사업비 확보·이전 대상 후보지 주민 설득 관건

이전 대상부지로 거론된 전남지역 지자체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꼬인 매듭을 풀기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머리를 맞댄다. 양측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책 사업 등 설득 방안을 마련한 뒤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한 것이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 가운데 하나인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민선7기 들어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해 옮기고, 광주 군 공항도 전남으로 이전하겠다는 원칙적 합의를 이뤘으나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무안, 해남, 신안, 영암 등 4개 지역을 예비 이전 후보지로 압축하고 국방부에 선정을 요청했으나 해당 지자체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담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에 대해 양 시·도는 광주 군 공항 이

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을 마련할 T/F팀을 조만간 구성하기로 했다.

양 시·도 기획조정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교통·건설, 공항 이전 추진 관련 부서 실무·책임자들이 참여하는 구성안이 검토되고 있다.

광주시는 이달 말에도 출범을 바라지만 전남도는 우선 방사광 가속기 유치전에 집중한 뒤 5월 중순께 구성하는 것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시·도가 일단 군 공항 문제를 풀어가기로 했으나 갈 길은 멀다. 당장 이전 후보지 자체를 설득할 만한 대안을 도출하는 게 T/F의 핵심 과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산업단지 조성·문화·관광 시설 등 국책 사업을 유치해 이전 후보지 주민의 마음을 되돌린다는 것이다.

5조7천억원인 이전 사업비, 4천500억원으로 책정된 지원 사업비 총액을 늘리고 보조금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도 예상된다.

사정이 급한 광주시는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평택 미군기지, 대구·수원 군 공항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로부터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단국대 분쟁 해결센터 비롯해 외부 위원 등으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21대 총선 당선인 등 정치권에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광주시는 최근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과 정책 간담회에서 예비 이전 후보지의 조속한 선정을 돕고 특별법 개정으로 정부 차원의 국책사업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군 공항을 옮기려는 광주시와 반지 않으려는 전남 기초단체 사이에서 중재 역할이 커진 전남도의 행보에는 방사광 가속기 유치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달 25일 방사광 가속기의 전남 유치에 힘을 모으고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의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최영범·표혜덕 기자

전남 농업 태양광 활용 선진화 박차

농식품부 실증연구사업 수주
녹차 등 특화 품목 우선 적용

영농 종사자가 많은 전남에 미래형 첨단 농업을 보급하기 위한 실증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사업'에 순천, 나주, 보성이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사업'은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농작물 경작과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품목 발굴 및 재배방법 등의 실증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군별 사업을 보면 순천에서는 오이와 딸기 2개 품목에 대해 순천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한다.

또 나주에서는 과수작목인 배와 포도 2 품종을 연구하고, 보성에서는 녹차 재배에 대해 전남도 농업기술원과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사업을 맡게 된다.

영농형 태양광은 도입 초기단계로 농식품부는 구조안정성, 경제성 여부 등에 대해 지난해까지 실증연구를 실시하고, 산업부는 지난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특화 품목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한 실증연구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남도는 지난해 벼재배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6개 마을에 설치·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해 신규 도입된 이번 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고, 선정 지자체는 품목별 생육상황과 생산성, 재배기법 등을 오는 2022년까지 연구해 품목 적정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비는 '태양광 설치비'에 국비 2억 1천만 원, 지방비 9천만 원 등 총 3억 원이 투입되며, 순천 농업기술센터(오이, 딸기)에 태양광 50kW 설치를 비롯 전남도 농업기술원과 녹색에너지연구원(배, 포도, 녹차)에 품목별로 각각 태양광 20kW씩 총 60kW 설치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영농 활동을 하면서 태양광 발전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득이 낮은 초기 귀농인이나 영농 규모를 축소할 고령 농민은 소득 보전의 장점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100kW 설치(농지 최대 600평 필요) 시 1년에 2천 4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향후 농식품부는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영농형 태양광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실증연구 결과를 토대로 영농형 태양광을 보급·확산할 방침이다.

서순철 전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은 영농비용을 절감하고 작목별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며 "다양한 소득작물을 발굴해 농민들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실증모델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성근 기자

경제단체, 광주형일자리 노동계 참여 촉구

광주상의 "사업 좌초 막아야"

광주지역 경제단체들이 21일 한국노총 광주본부의 광주형일자리 참여 복귀를 촉구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이날 성명에서 "지역 노동계가 광주형일자리 협약 파기를 선언하면서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설립 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며 "지역노동계는 당초의 노사 상생발전협정서의 정신에 따라 동 사업에 조속히 복귀하고, 향후에는 노사민정협의체 내에서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지역 노동계를 비롯한 지역사회와 소통과 협력

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당초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해 광주형일 자리를 성공적인 모델로 안착 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도 성명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고용 대란이 현실화하는 시점에서 광주형일 자리는 지역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유일한 희망"이라며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민의 염원, 기대를 생각해서 광주형일자리와 관련한 이견을 광주노사민정 협의회 틀 안에서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대화의 장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이라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